IB 2020-07

이슈브리프

ISSUE BRIEF

발행일 : 2020년 7월 23일 (목)

CONTENTS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여의도연구원
THE YEOUIDO INSTITUTE

이슈브리프

(IB 2020-07)

CONTENTS

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 1

Ⅱ.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 12

Ⅲ.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 20

발 행 인: 지상욱
편 집 인: 이윤식
편집위원: 김창배, 나경태, 김태원(외부)
편집간사: 김진솔
발 행 일: 2020년 7월 23일
발 행 처: 여의도연구원 인 쇄: 디엔시파크

Contents_

금주(7월 4째주)에는 부동산정책 국민인식, 美대선 판세분석, 문화예술인 지원방안 등 3편의 이슈를 다루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文정부의 부동산정책 실정에 대한 국민여론 분석을 통해 정책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제2편에서는 11월로 예정된 美 대선의 판세를 분석하고, 향후 변화될 한반도 및 대북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편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실태를 점검, 올바른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았습니다.

제1편: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 이에 여의도연구원에서는 '6.17부동산대책' 및 '7.10대책'의 효과 등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해 봄. 분석 결과, 국민의 2/3 이상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연령과 지역, 이념성향, 직업군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름. 시장원리에 반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질타하고 있으며,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가계경제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되, 여론을 반영할 정책영역과 선도할 정책영역을 구분한 투트랙 추진이 바람직함을 시사함

제2편: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이윤식 안보통일센터장)

7.17(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약 10%p 이상 앞서고 있음(△WSJ·NBC(7.15): 40 vs. 51, △USA투데이(7.8): 41 vs. 53 등). 그러나 선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TV토론회(3번)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러닝메이트 선정(8.1) 등도 변수로 남아 있어 바이든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구체적 대외정책 및 외교안보 공약은 8월 전당대회 이후 릴리스될 걸로 보이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유지, 바이든은 '역내 동맹과의 협력' 강조가 예상. 특히, 동북아 정책은 누가 되든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나, 對한반도/대북정책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클 걸로 예상. 주목할 만한 부분은 美 대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인데, '대북정책 관련 한미간 이견 확대', '한국의 대외협상력 약화로 인한 코리아 패싱' 등이 예상되고 있는는 바, 관련 대책 마련이 긴요해 보임

제3편: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이윤경 연구원)

코로나19로 불특정 대면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급 고용안정금 및 창작지원금 등을 투입함. 그러나 노동·소득 증명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장벽을 호소하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에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고 '예술인 재난 보험'과 같은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언택트(Untact)로 변화하는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에 맞는 지원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작성: 이종인 수석연구위원 (lee.jong.in@ydi.or.kr)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 이에 여의도연구원에서는 '6.17부동산대책' 및 '7.10대책'의 효과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를 여론조사를 통해 파악해 봄. 분석 결과, 국민의 2/3 이상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연령과 지역, 이념성향, 직업군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름. 시장원리에 반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질타하고 있으며,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가계경제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되, 여론을 반영할 정책영역과 선도할 정책영역을 구분한 투트랙 추진이 바람직함을 시사함

1. 분석 배경

○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인 '6.17대책' 및 후속 '7.10대책'에도 불구, 기대했던 집값안정 효과도 없이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부각

○ 여의도연구원에서는 黨 정책위와 공동으로 개최한 "긴급「부동산정책 진단」간담회"(7.7)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失政을 진단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고자 함

-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인식, △'6.17대책'의 효과, △'7.10대책'에 대한 찬반, △집값 상승의 가계부담 정도, △우선적인 정책 순위 등 문재인정부의 제반 부동산정책을 평가

여론조사 개요

■ **조사일시**: 2020년 7월 10일(금) 16:00~18:00

■ **모집단 및 표본 크기**

-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59명

■ **조사방법**: ARS 전화조사

- 휴대전화 RDD 1,008명 (80%), 유선전화 RDD 255명 (2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2.76%P (최대허용 표집오차)

※ 조사표작성·통계실사는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에서 수행

2. 분석 결과

1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 국민의 2/3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긍정적 인식은 부정적 인식의 1/3에도 미치지 못함(30.5%)

※ 최근 시행된 한국 갤럽 등 타 여론조사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임

- △20·60대, △영남·충청지역, △보수·중도, △자영업·판매영업·생산기능 노무직군·학생군의 부정평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 현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인 호남권에서조차 부정(47.4%)이 긍정(41.5%)을 5.9%p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인식은 열흘 전(7.1) 여의도연구원 자체조사 대비 5.2%p 상승하여, '6.17대책' 이후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비율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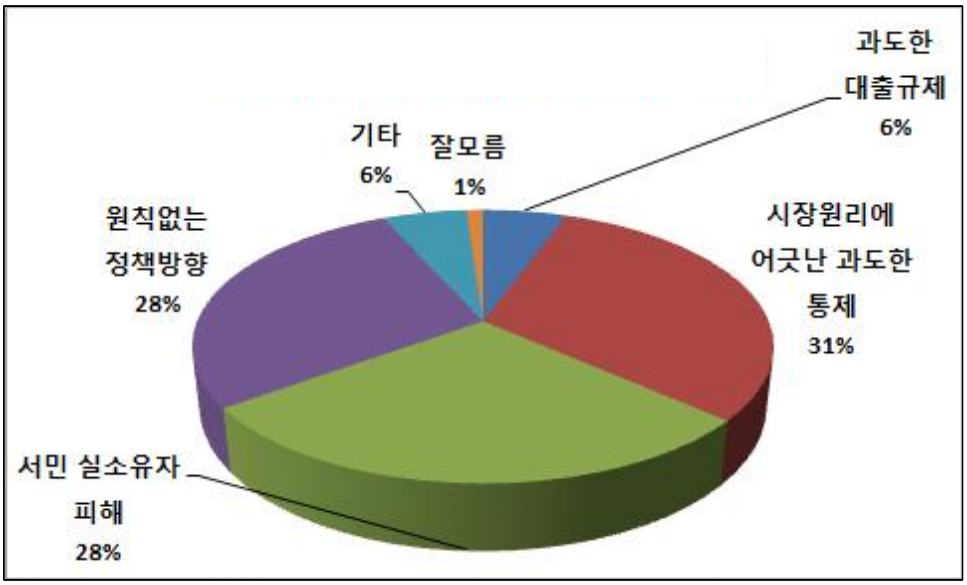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

- △매우 잘함(12.7%), △어느정도 잘함(17.8%), △어느정도 잘못함(19.0%), **매우 잘못함(44.4%)**, △잘 모름(6.1%)

○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책’(30.9%)이 부정적 인식의 주된 배경

- ‘서민·실소유자 피해’(28.5%), ‘원칙 없는 정책 방향’(28.3%)을 그 다음의 문제점으로 인식

[그림 Ⅰ-1]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



- 다만, 연령, 정치성향, 주택소유 여부 등 응답자 특성에 따라 정책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20대는 ‘시장원리에 어긋남’(43.5%)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한 반면, 50대 이상은 ‘원칙없는 정책 방향’(33.3~37.7%)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

  • 무주택자는 ‘서민·실소유자 피해’(30.5%)를, 1주택자는 ‘원칙없는 정책방향’(33.3%)을, 다주택자는 ‘시장에 반하는 정책’(42.7%)을 최우선적 문제점으로 인식

○ 긍정평가(비율이 비록 낮지만 그) 이유도 눈여겨봐야 함. ‘서민·실소유자 위주 정책’(43.8%) 및 ‘보유세·종부세 인상’(38.1%)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남

- 특히, 20대 및 50대에서 서민·실소유자 위주 정책이어서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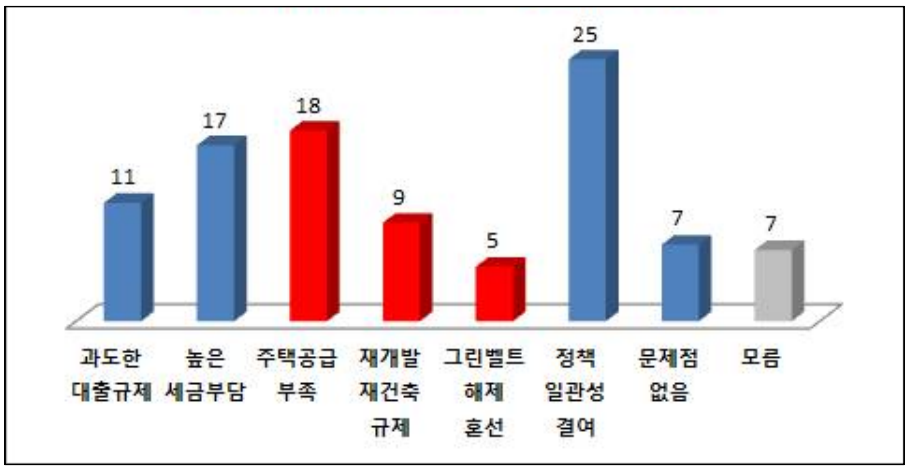
>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자의) 긍정 평가 이유
>
> - △대출규제 강화(10.1%), △보유세·종부세 인상(38.1%), △**서민·실소유자 위주 정책(43.8%)**, △정부·여당 정책 지지(4.4%), △기타·잘모름(3.7%)

○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정책의 일관성 부재

-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방향’(25.0%)인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주택공급의 부족(18.2%), △세금부담(16.8%), △대출 규제(11.3%) 순으로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됨

[그림 Ⅰ-2] 문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문제점



- 주목할 점은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17.0%)은 예상보다 높지 않음. 다만, 20대(19.5%)·학생(20.1%)·다주택자(29.7%) 등의 경우 높은 세금부담을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최대 문제점으로 인식

○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정책 논란의 책임 소재에 관해서는 “대통령에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다”(36.5%)는 인식이 다수로 나타남

- 이어, △야당(23.8%), △국토부장관(16.3%), △여당(12.5%)의 순임

- 야당의 책임을 1순위로 한 경우는 진보(39.6%) 및 중도진보(36.7%), 판매영업서비스직(33.7%)에 불과하며, 호남권의 경우도 대통령 책임(29.3%)을 1순위로 꼽음

2 ‘6.17대책’ (및 ‘7.10대책’ 등) 후속·보완조치의 효과

○ 국민들은 ‘6.17부동산대책’의 효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

- 대책 발표 후 3주 경과 시점에서 대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55.6%)이 긍정(29.7%)의 2배에 달함

  • 모든 연령, 지역, 직업군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게 나타남(51.8%~). 다만, 이념성향 별로는 진보(45.0%) 및 중도진보(45.2%) 군에서 긍정평가가 미미하게 높게 나타남

> ■ **‘6.17(보완)대책’의 효과**
>
> - △효과가 있을 것(29.7%), △**효과가 없을 것(55.6%)**, △잘모름(14.6%)

-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내 집 마련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인식이 매우 높음(66.2%)

  • 정부·여당의 지지층 비율이 높은 30~50대, 호남권, 진보층 등의 경우도 부정적 인식 비율이 긍정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남

○ ‘7.10부동산대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은 미지수

- ‘6.17대책’의 보완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양도세의

대폭적 인상 등을 담은 '7.10대책'에 대해서는 찬성(56.0%)이 반대(32.2%)보다 높게 나타남

※ 다만, 설문 문항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맞춰져 있어, 증세에 따른 조세부담 등에 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추론

• '7.10대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일정 시일이 경과된 후에 가능할 것임

■ **'7.10대책'에 대한 찬반**

- △**찬성(56.0%)**, △반대(32.2%), △잘모름(11.8%)

3 집값상승의 가계부담 정도 및 향후 예상

○ 집값 상승으로 가계 경제의 부담이 크게 높아짐

- 문재인 정부에서의 전반적인 집값 상승은 가계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 응답자의 70%가 집값 상승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이는 연령, 지역, 이념성향, 직업에 관계없이 공통된 사항임(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비율과 비슷)

■ **집값 상승의 가계부담 정도**

- △**매우 부담(36.4%)**, △어느정도 부담(33.0%), △별로 부담안됨(19.1%), △전혀 부담안됨(8.0%), △잘모름(3.5%)

○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 "지인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 부럽거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52.8%)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36.9%)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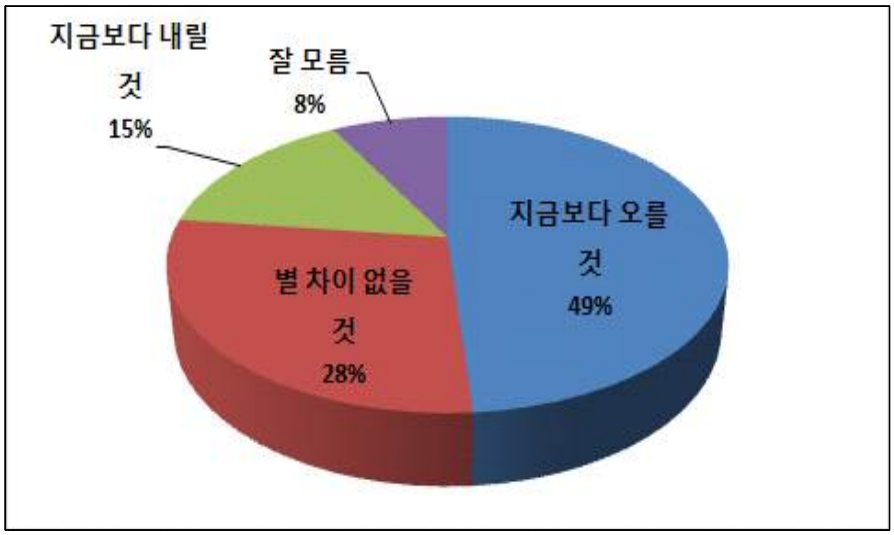
• 특히 △30대(34.1%)·40대(37.7%), △지방거주자(26.0~37.6%), △무주택자(35.3%), 자영업(39.1%)의 경우가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심하게 느낀다"고 응답

○ 국민들은 현 정부 잔여임기 중에는 집값 안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

-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비율(48.8%)이 하락(15.0%)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그동안 22차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래)에서는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민이 다수

[그림 Ⅰ-3] 문정부 잔여임기 중 부동산 가격 예상



4 부동산정책의 우선순위

○ 향후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부동산정책의 우선순위는 투기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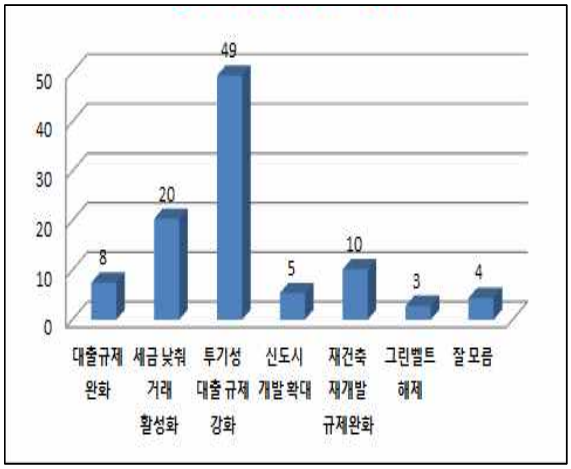
- 작금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책으로 ‘투기성 대출 규제 강화’(49.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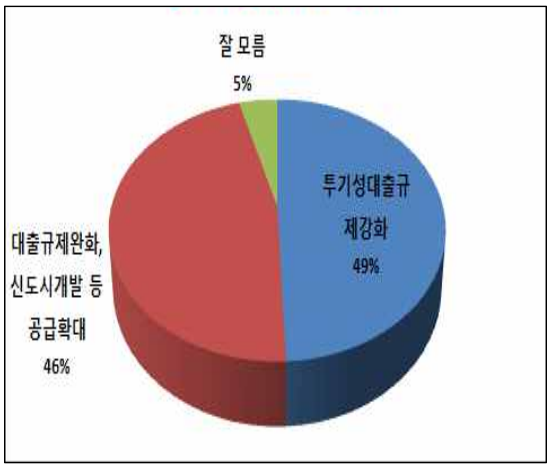
• 연령, 지역, 이념성향, 직업군에 무관하게 최우선순위로 나타남

- △감세를 통한 거래활성화(20.4%),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10.2), △대출규제 완화(7.5%)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신도시개발 확대(5.4%), △그린벨트 해제(2.8%)에 관해서는 선호도가 매우 낮음

[그림 Ⅰ-4] 향후 우선해야 할 정책





3. 평가 및 시사점

□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의 공통된 인식

○ 부동산정책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직업군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큰 차이로 앞섬

- 이는 정책적으로 주목해야 할 매우 특이한 사안임. 정치 이슈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의 失政을 대표하는 소주성, 최저임금, 탈원전 등 부동산 외 경제·사회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정치이념 성향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현상이 일반적임(이들 정책용어가 정치적 이념화되어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

  • 예컨대 최저임금이나 탈원전 이슈의 경우 30·40대, 호남권, 판매영업 서비스·사무관리전문 직군의 경우는 자신의 이념성향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경향

- 하지만 부동산(주택·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이러한 경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금번 여론조사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추진하되, 여론 중시의 정책적 접근이 요망됨

○ 분석 결과,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규제일변도, 일관성이 결여된 부동산 정책에는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높지만, 다주택(·고가주택)자의 투기 억제를 위한 조세·금융 규제강화에는 긍정적인 여론

- 덧붙여,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서민이나 (중·저가)실소유자를 우선하는 정책으로 인식하여 이에 찬성하는 (상당수 중도 및 진보성향 국민의) 여론을 읽을 수 있음

○ 여론을 반영할 정책영역과 선도할 정책영역을 구분한 투트랙(two-track) 추진이 바람직

- **(여론 반영)** 저소득서민·무주택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국민의 주거권 실현 및 주거복지의 지속적 확대
  -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확대 및 서민층 특히 청년층의 주택구입 기회 확대 및 생애 첫 주택구매에 대한 LTV·DTI 기준 유연화
  - 신혼부부, 유자녀, 청년, 장기무주택자 등 주거소외계층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및 장기임대주택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 및 확대

- **(여론 선도)** 시장원리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정책의 지속 추진
  - 세제, 금융규제, 공공지원 기준의 빈번한 변경을 억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세제·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으로 국민의 세부담 감소
  -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내 신규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공급 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주택의 유무, 소득수준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이 바람직

- 유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절대빈곤·저소득자에게는 공공주거(복지)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

□ 부동산 과세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신중할 필요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뿐 아니라 세금부담 완화에 대한 절실함도 상대적으로 약한 편임

- 부동산 세금 강화 정책에 대한 거부감(17.0%)은 주택공급부족(33.0%) 및 일관성없는 정책(25.0%)보다 후순위로 나타남

-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감세를 통한 거래활성화'(20.0%)보다는 '투기성대출 규제강화'(49.0%)와 '공급확대'(46.0%)에 더 절실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 '7.10대책' 및 후속조치 등 현 정부의 대폭적 부동산 세금 인상 대책에 따른 가계경제 부담을 체감하는 시점에서는 국민의 (조세)저항이 크게 증가할 것임

- 문재인 정부의 약탈적 증세 대책이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집값 불안정 지속으로 결국 서민·무주택자·주거소외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도) 급증하게 됨을 조만간 인지하게 될 것임

□ **여권 지지층의 정책 선호도 파악, 정책에 반영할 필요**

○ (중도)진보 성향의 국민들은 서민·실소유자 위주 정책과 보유세·종부세 인상 등 증세정책에 매우 긍정적인 입장

- 덧붙여, 20대 및 50대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을 금번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시 감안할 필요

□ **국민들은 무엇보다 투기억제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줄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 추진에 유념해야 할 것임**

○ 국민들은 작금의 부동산 문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를 (정책실패에 기인한) 투기성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감세를 통한 거래활성화,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에도 관심이 있지만, 특히 거의 모든 연령, 지역, 이념성향, 직업군에서 투기성 대출규제 강화를 주문한 점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음

○ 그린벨트 완화 및 신도시개발 확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관해서는 국민의 여론이 높지 않은 점에도 주목할 필요

Ⅱ. 2020 美 대선 판세분석과 향후 대응방안

작성: 이윤식 안보통일센터장 (lee.youn.seek@ydi.or.kr)

7.17(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트럼프에 약 10%p 이상 앞서고 있음(△WSJ·NBC(7.15): 40 vs. 51, △USA투데이(7.8): 41 vs. 53 등). 그러나 선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고, TV토론회(3번)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민주당 러닝메이트 선정(8.1) 등도 변수로 남아 있어 바이든이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움. 한편, 구체적 대외정책 및 외교안보 공약은 8월 전당대회 이후 릴리스될 걸로 보이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유지, 바이든은 '역내 동맹과의 협력' 강조가 예상. 특히, 동북아 정책은 누가 되든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걸로 보이나, 對한반도/대북정책은 비교적 변화의 폭이 클 걸로 예상. 주목할만한 부분은 美 대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인데, '대북정책 관련 한미간 이견 확대', '한국의 대외협상력 약화로 인한 코리아 패싱' 등이 예상되고 있는 바, 관련 대책 마련이 긴요해 보임

1. 美 대선 판세분석

○ 7.17(金),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에 10%p 이상 앞서고 있음

- 올 2월 민주당 후보경선 때만 해도 현직 프리미엄으로 트럼프가 민주당 주요 후보들을 압도했으나, 코로나로 판세에 변화가 발생

- 특히, 코로나와 플로이드 사건이 확산된 5~6월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트럼프와 바이든 격차가 두자릿 수로 굳어지는 분위기

※ 주요 언론사 격차 =〉 △USA투데이(7.8): 41% vs. 53%, △NYT(6.25): 36% vs. 50%, △Fox(6.16): 38% vs. 50%, △CNN(6.8): 41% vs. 55% 등

※ 최근 지지율 격차 =〉 △WP·ABC(7.19) 40% vs. 55%, △퀴피니액大(7.15): 37% vs. 52%, △WSJ·NBC(7.15): 40% vs. 51% 등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던 '러스트 벨트'와 '경합주'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

- 2016년 트럼프 승리의 요인은 '거대 주'(켈리포니아 55석, 텍사스 38석 등)와 '러스트 벨트'(펜실베니아 20석, 미시간 16석 등)에서의 석권 덕택이었으나, 최근 강세지역인 러스트 벨트에서 격차가 커짐

- 또한, '6대 경합주'(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에서도 한달 사이 바이든의 초박빙 우세로 바뀌는 분위기

※ 6.3 Foxnews(바 vs. 트): △애리조나 44:45, △플로리다 48:45, △노스캐롤라이나 46:45, △미시간 46:46, △펜실베니아 46:46, △위스콘신 47:46 등

※ 6.17 CNBC(바 vs. 트): △애리조나 45:45, △플로리다 50:43, △노스캐롤라이나 47:45, △미시간 48:45, △펜실베니아 49:46, △위스콘신 48:44 등

○ 하지만 아직 바이든이 확실히 승기를 굳혔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음

- 선거일까지 4개월이나 남아 판세를 흔들 변수가 많다는 점, 3번의 후보토론회가 있고, 또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선정(8.1) 등도 변수

• 바이든이 고령(79세)이란 점도 변수인데, 트럼프가 최근 이를 부각하며 집무 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이 포인트

- 무엇보다 코로나와 인종차별적 발언에도 트럼프 지지층이 이반하고 있다는 징후가 없고, 여전히 40%대 지지를 유지 중이란 점

- 이에 선거 전문가들은 "더이상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다"며, 2016년처럼 "투표율 勝, 선거인단 敗"라는 결과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

2. 예상되는 돌발 변수들

○ 우선, 美 대선에서 항상 쟁점이었던 '경제 문제'가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만나 그 폭발력이 더욱 더 커짐

- 코로나 여파가 경제불황과 맞물리며 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이 트럼프의 미숙한 대응 탓이란 분위기가 생성됐으나, 최근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는 상황

※ 6월말 美 노동부 발표를 보면, 일자리 증가(250만개), 실업률 감소(14.7% → 13.3%), 실업수당 신청자 감소(210 → 190 → 150만명) 추세

-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의 2차 유형이 발생치 않는다면 3/4분기는 V자로 반등할 것이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벗어날 것이라 전망

- 일각,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이 잘해서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실수(코로나 대응 미숙, 인종차별적 막말) 때문"으로 봐, 바이든의 승리를 단정하기 어렵고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고 평가

○ 다음, 존 볼튼에 이은 메리 트럼프(조카)의 폭로 사태까지 발생하며 트럼프에게 불리한 '양심선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국면의 진정 여부가 관건

- 볼튼은 "트럼프의 자질과 실책, 비핵화협상 비화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6.23)했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 워싱턴 정가서 큰 논란

- 한편, 메리 트럼프(55)는 회고록(7.14)에서 "트럼프가 와튼스쿨에 합격하기 위해 대리시험을 시켰다"고 폭로하며 '입시 부정'을 제기

• 이는 단순히 거짓말 차원이 아니라 '입시 부정'에 해당되는 바, 도덕성에 타격을 입는 것을 넘어 '법적인 문제'로 확산될 소지가 있음

○ 마지막, 3번의 TV 토론회에서 후보자의 말실수 및 바이든의 러닝메이트 관련 '컨벤션 효과' 등도 주요 변수로 작용 전망

- 최근 트럼프는 바이든의 잦은 실언들을 약점으로 보고, 관례상 3회로 정해진 대선 후보간 TV토론회를 늘릴 것을 제안했으나, 바이든 캠프에서 거부
  - 현재 관련한 선관위의 입장은 양측 캠프에서 합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여지가 남아있음

- 한편, 최근 바이든 캠프에서 러닝메이트로 6명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를 검토 중이며, 현재 수잔 라이스(56)가 유력한 걸로 관측
  - 일각, "바이든도 약체인데 라이스도 대중성이 없어 '컨벤션 효과'를 위해서는 미셸 오바마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 막판 변수로 작용

○ 한편, 코로나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중인 바, 이로 인한 투표율(우편투표) 저하가 변수가 될 수 있음

-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스윙보터'와 무소속 투표에 의존하고 있어서 투표율 극대화와 우편투표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

- 일각에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편투표로 투표율은 상승할 것이나, 개표 지연 등 대혼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
  - 현재 우편 투표는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과 흑인의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어 민주당 유리하고 공화당에 다소 불리할 것으로 전망

3. 각 캠프별 전략 및 진용

○ 트럼프는 바이든과 지지율 격차 15%p 벌어지자, 캠프 선대본부장 '브래드 파스케일(44)'을 전격 경질

- 트럼프는 페북(7.15)을 통해 "파스케일 본부장을 디지털전략 담당 고문에, 빌 스테피언(42) 부본부장을 본부장에 임명한다" 밝힘
  - 스테피언은 2004년 부시 캠프, 2008년 매케인 캠프 등 공화당선거에 잔뼈가 굵은 전략가로, 캠프 좌장인 쿠슈너의 신임이 두터움

- 파스케일은 2016년 대선 때 공격적 디지털전략을 구사해 힐러리 후보를 악마화하는데 성공해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이었으나,
  - 올 4월부터 코로나 방역 실패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10만명 올 거라던 오클라호마주 유세 흥행에 실패하면서 책임을 물은 걸로 추정

- 한편, 선거전략은 보수층과 노동자 등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민문제, 중국문제 등에 집중하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새로운 슬로건도 모색 중

※ 기존 '미국을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 외에, '최고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등을 추가할 예정

○ 반면, 바이든 캠프는 케이트 베딩필드(책임자), 마이클 지윈(대변인) 등 전략가들이 유권자들과 조용히 접촉하며 '바닥표 다지기'에 나섬

- 선거전략은 후보의 조용한 성격과 말실수 최소화를 위해 즉흥 연설을 줄이는 등 '로우 프로필(low profile, 저자세) 전략'에 집중

- 최근 워싱턴 외교가에선 주요국 대사관들이 '바이든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문을 타전하며, 정권 교체에 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져서 바이든 캠프로 전문가와 전직 인사들이 몰리기 시작

- 특히, 바이든 캠프에 줄을 대려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넘쳐나는데 무급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전문가를 합쳐 1000여명에 육박

※ 주요 인사로 토니 블링컨(전 국무부 부장관), 니콜러스 번스(전 국무부 정무차관), 제이크 설리번(전 부통령 안보보좌관), 커트 캠벨(동아태담당 차관보) 등

○ 한편, 양 캠프의 인적 구성을 보면, 바이든 캠프에 여성 및 흑인 참모 비율이 트럼프 캠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바이든 캠프 직원 중 여성은 53%, 트럼프의 52%보다 앞서며, 고위 참모진 여성 비율도 바이든 58% 對 트럼프 56%로 나타남

• 또한, 유색인종 참모 비율도 바이든 캠프가 35%로 트럼프 캠프의 25%보다 10% 높게 나타남

4. 對한반도 및 대북정책 비교

○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 아직 각 진영별 대외정책 및 외교안보 공약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음

- 구체적 공약은 8월 전대 이후 나올 걸로 보이며,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유지, 바이든은 '역내 동맹과의 협력' 강조가 예상

- 트럼프는 1기 동안 이뤄낸 동맹들과의 '부담 분담' 등에 대한 치적을 강조하면서 2기에도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

- 바이든은 미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위해 강력한 군사력 투사를 주장하면서, 동맹/우방국들과의 협력에 방점을 둘 것으로 예상

○ 먼저 對동북아 정책, 對中정책과 對日정책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대중정책 관련 트럼프와 바이든의 차이는 중국을 다루는 '방식' 정도이지, 양측 모두 '절제된 대중정책'은 오바마 때 이미 끝났다고 평가

  • 즉, 트럼프가 對中 통상·금융 등 경제에 집중한다면, 바이든은 對中 직접 갈등보다는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보다 강경하게 압박하는 차이 정도

- 대일관계는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누가 당선되든 간에 美-日 협력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임

  • 단, 韓-日 갈등의 조정에 무관심했던 트럼프에 비해 바이든은 좀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차이

○ 그러나 한반도 및 대북정책 관련해선 트럼프가 재선이 되냐 바이든이 당선이 되냐에 따라 비교적 많은 변화가 예상

-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는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하며,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전략적 가치'를 무시한 반면 바이든은 주한미군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

  • 트럼프는 여전히 '안보무임승차'에 기반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 바이든은 "우리의 핵심동맹인 韓-日을 통해 北-中을 견제할 것"이라 주장

- 특히, 미북 정상회담도 트럼프는 '이벤트성 top-down'을 선호하지만, 바이든은 '실무회담 중심의 bottom-up'을 선호해 극명히 갈림

- 한편, 양자의 공통점은 북핵 해결 前 대북제재 완화 불가와 비핵화를 위해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다는 점 등

5. 향후 전망과 대책

○ 美 대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① 대북정책 관련 한미간 이견 확대, ② 한국의 대외협상력 약화, ③ 대선前 미북협상 가능성 등

- 우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북간 직거래 성사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文정부와 北인권문제 관련 대북 이견이 발생 가능성 높아짐

  • 즉, 누가 당선되든 대북정책 및 북핵정책 등에 있어서 한미간 이견으로 인한 갈등 확대는 불가피

- 또한, 지난 3년간 文정부의 대외/대북협상력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코리아 패싱'의 현실화 가능성은 불배제

- 마지막, 매우 낮은 가능성이기는 하나 볼턴이 주장한 '10월 서프라이즈'가 현실화 될 경우, 미북간 '스몰딜+ α'로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는 최악의 결과 발생 가능성이 커짐

※ "스몰딜 + α": 北이 영변시설 + HEU·ICBM 일부시설 불능화에 나서면 美가 '스냅백(약속 불이행시 원점)'을 전제로 제재를 완화

○ 트럼프가 당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간 이견 확대'와 '대선 이후 한국의 대외협상력 약화'는 불가피한 바,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

- 기존 文정권의 '친북적 대북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을 국회 차원(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청문회 활용)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

- 바이든은 물론이고 트럼프도 대내외 정책 재검토 기간이 있을 것인 바, 지금부터 美 정책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당의 의견을 신임 행정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채널을 마련

  • 특히, 바이든 당선에 대비해 브루킹스연구소, CSIS, 新미국안보연구소 등과 평시 협력관계를 강화해 두는 것이 급선무

Ⅲ. 코로나19에 따른 문화예술인 피해 현황 및 시사점

작성: 이윤경 연구원 (yi.yun.kyung@ydi.or.kr)

코로나19로 불특정 대면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긴급 고용안정금 및 창작지원금 등을 투입함. 그러나 노동·소득 증명이 어려운 예술인들은 지원금 신청에 대한 장벽을 호소하며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이에 정부의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고 '예술인 재난 보험'과 같은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및 언택트(Untact)로 변화하는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에 맞는 지원정책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1. 피해 현황

□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계 피해 현황

○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많은 산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불특정 다수의 대면이 불가피한 문화예술계의 피해는 막대함

- (공연 분야) 2020년 상반기 공연예술 분야의 취소된 공연은 6,457건, 고용 피해는 305억 원, 매출 피해는 823억 원에 달함[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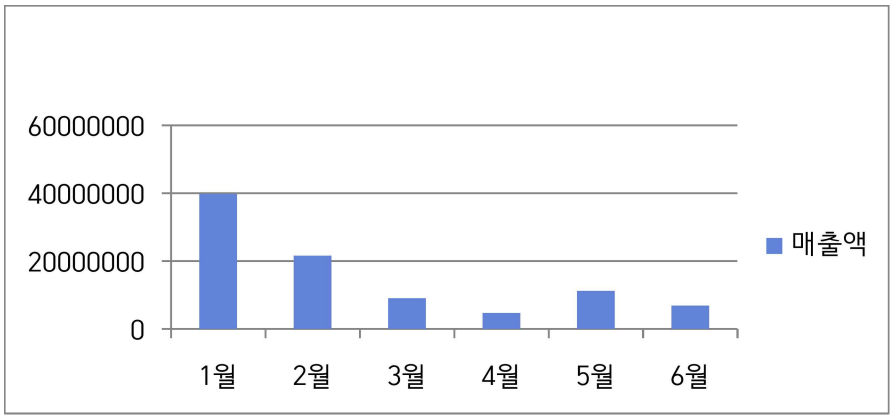
※ 매출액 2020년 1월 약 380억 원에서 4월 약 46억 원으로 급락[2)]

- (시각예술 분야) 취소된 전시는 1,525건, 고용 피해는 34억 원, 매출 피해는 666억 원으로 추정됨[3)]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2) KOPIS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http://www.kopis.or.kr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가 문화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그림 Ⅲ-1] 2020년 전반기 공연예술계 매출 현황

(단위: 천원)



* 자료: KOPIS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 주: 2020년 1월(약 400억 원) → 2월(약 200억 원) → 3월(약 90억 원) → 4월(약 46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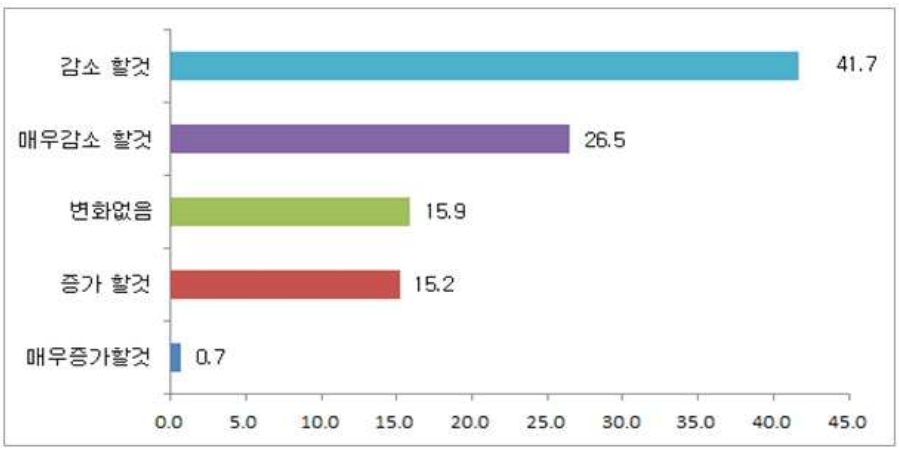
○ 전국 예술인 평균 88.7%가 수입이 감소[4)]

- 한국예술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수입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예술인 비중이 서울(100%), 경남(94.1%), 충남·전북(93.3%), 강원(90.9%), 충북(90.0%) 순으로 높았음

- 코로나19가 종료된 후에도 68.2% 이상의 예술인은 수입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 코로나19 종료 후 예술인 수입에 대한 기대

(단위: %)



4) 한국예술총연합회, '코로나19 피해 조사 결과'

2. 정부 및 지자체 지원 현황[5)]

□ 중앙정부 지원 사례

○ 고용안정기금 및 창작지원금 지원 관련

- 예술인 개인에게 '특별융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긴급 고용안정금', '창작 디딤돌 사업' 등을 지원하고 극장에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함

○ 심리상담 및 창작활동 지원 관련

-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을 시작으로 '2020년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대중음악공연 지원 사업' 정책을 시행함

〈표 Ⅲ-1〉 중앙정부 지원 내용

지역	제목	최대 지원금액	일자
전국	'창작 디딤돌 사업'(창작 준비금 지원)	1인당 300만 원	2020.07
	긴급 고용안정금 지원	1인당 150만 원	2020.06
	대중음악공연 지원 사업	공연당 4,500만원~1억원	2020.06
	공연예술 특성화 극장 운영 지원	1,000만 원	2020.05
	특별융자 생활 안정자금 대출		2020.03
	2020년 예술창작활동 지원 사업	300만 원 선지급	2020.03
	예술인 심리 상담		2020.03

5)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코로나19 문화예술 지원사업'

□ 각 지자체 지원 사례

○ 고용안정기금 및 창작지원금 지원 관련

- 생활지원금(서울),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및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인천), 긴급생계지원금(부산),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기초 창작활동비 지원, 창작활동 준비금 특별지원(충북) 등 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함

○ 심리상담 및 창작활동 지원 관련

-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서울), 예술인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인천), 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대전), 예술인 기살리기 프로젝트(대구) 등을 시행함

- 경기도는 '경기도형 문화뉴딜 프로젝트'로 현금지원 대신 통합적 지원 책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도 차원의 소규모 단기적 지원에 머무름

〈표 Ⅲ-2〉 각 지자체별 지원내용

지역	제목	최대 지원금액	일자
서울	생활지원금 지급	1인당 100만 원	2020.07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공연당 1,000만 원	2020.06
	'힘내라 콘서트'(세종문화회관)	공연당 3,000만 원	2020.04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 긴급 예술 지원 공모 -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 문화기획활동	1인당 1,000만 원 공연당 2,000만 원	2020.04
경기	경기도형 문화 뉴딜 프로젝트 - 소액다건 방식의 지원, 공연(백만 원의 기적), 독립영화(드라이빙 시어터), 작품 구입, 콘텐츠 제작, 조합, 예술강사, 영화 종사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 지원		2020.04
	공모사업 예산 선지원 후정산 지원		2020.04

인천	인천형 예술인 지원 사업	개인 1,500만 원, 단체 3,000만 원	2020.05
	예술인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건당 2,000만 원	2020.05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건당 500만 원	2020.04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30만 원	2020.04
대전	지역 예술인 기초 창작활동비 지원	1인당 100만 원	2020.05
	예술인 활동비 지원	총예산 14억 원	2020.04
	예술인 복지 지원	총예산 2억 원	2020.04
	신 콘텐츠 도입과 예술계 일자리 창출	총예산 18억 원	2020.04
충북	창작활동 준비금 특별 지원	1인당 200만 원	2020.05
	기초 창작활동비 지원	1인당 100만 원	2020.05
	무급 휴직 근로자 지원	1인당 100만 원, 단기일자리 제공	2020.04
충남	코로나19 충남문화예술기관 대책반 운영 - 올해 사업 지원액 전액 소진 원칙		2020.03
강원	문화예술 지원 사업 운용지침 완화 - 참여 인력 사례비 선지급, 사업포기 페널티 미부여, 사업계획 변경 지침 완화, 단체대표자에게 출연료, 연출비 지급 가능, 사업비 방역관련 전용 가능		2020.03
대구	예술인 기 살리기 프로젝트	공연료 70% 선지급	2020.04
	‘힘내요! 대구 예술인 콘서트’ (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총예산 5,000만 원	2020.04
경북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동비 지원	개인 500만 원, 단체 1,000만 원	2020.04
부산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 원	2020.06
울산	비대면 예술창작활동 지원	개인 500만 원, 단체 1,000만 원	2020.06
	피해 예술인 실태조사 및 중기대책 방안		2020.03

	메네사 기금 조성, 창작공간 무료 대관, 지원금 사례비 선지급		2020.03
경남	창작활동 준비금 특별 지원	1인당 200만 원	2020.04
	예술인 창작 자금 대출 지원	1인당 5,000만 원	2020.04
	직접 손실 발생 예술 단체 지원	500만 원	2020.04
광주	'광주예술로 기획 사업'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팀당 1,000만 원	2020.05
	'300 소리 없는 아우성' (코로나19 극복 예술 배너 사업)		2020.05
	생계비 지원	1인당 100만 원	2020.04
전북	'예술인 파견 지원-예술로' (지역형 사업의 예술인 임금 보전)	1인당 140만 원	2020.03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 소액자금 대출	1인당 500만 원	2020.03
	문화예술 교육 강사 시수 보전		2020.03
전남	'찾아가는 법률 컨설팅'		시행예정
	전남문화예술 지원 사업	1인당 1,000만 원	2020.05
	전남 예술인 복지 사업 - '전남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 설치, 예술인 일자리 파견지원 사업	총예산 4억 원	2020.04
제주	전시·공연 시설 대관료 지원, 온라인 공연·예술창작 영상 콘텐츠 지원	총예산 4억 원	하반기
	사업내용 변경·포기에 따른 보조금 취소 또는 삭감 조치 기준 완화		2020.04
	취소·연기된 문화예술 사업의 집행 예산 정산, 선정 후 연습 불가로 취소된 사업 지원	총예산 7,300만 원	2020.04
	예술 창작 기획안 공모	1건당 50만 원	2020.04
	예술인 창작 융자금 원금 상환 유예		2020.04

3. 시사점 및 제언

○ 현금 지원의 실효성 제고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인 지원방안 중 현금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함

- 해외의 경우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더해 긴급 현금 지원이 이루어진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하고 현금 지원조차 수급 자격이 까다로워 많은 문화예술인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계약서를 적지 않고 일하는 문화예술계의 관행상 노동 증명, 소득 증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술인들이 지원금 지원에 어려움 호소

〈표 Ⅲ-3〉 해외국가의 문화예술 영역 긴급지원 사례

국가	내용
미국[6]	· 문화예술 분야에 총 2억 3천만 달러 이상 투입 · 국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비영리 예술기관에 7,500만 달러 지원
프랑스[7]	· 문화예술 분야에 2,200만 유로를 긴급 지원 · 실업보험급여 혜택 2021년 8월 말까지 연장 · 예술인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에게 최대 1,500유로 지원
독일[8]	· 개인에게 3개월간 최대 5,000유로, 기업에게 1만 5,000유로 지원
영국[9]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가 개인과 단체에 총 1억 6,000만 파운드를 지급 · 중소기업에게 월 2,500파운드를 상한으로 종업원 임금의 80%를 지원
일본[10]	· 전년 동월 대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엔의 수입 감소분을 개인에게 지급

6) 미국 정부, https://www.usa.gov/coronavirus
7) 프랑스 문화부, https://bit.ly/2OErew3
8) 유네스코, https://en.unesco.org/creativity/covid-19/emergency-grants-german-freelance-cultural-workers
9) 영국문화예술위원회, https://www.artscouncil.org.uk/covid19
10) 일본 문화청, https://www.bunka.go.jp/english/pr/fy2020/index.html

-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공연 사업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보다 공연사업비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현금 지원을 할 경우 더 이상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필요

○ '예술인 재난 보험', '보호 매뉴얼 개발' 등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향후 감염병의 주기적인 도래를 예상하는 바, 재난 때마다 땜질식 현금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그 한계가 명확할 것임

- 따라서 재난에 대비한 문화예술계 지원의 명확한 보호 매뉴얼 개발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함

- 문화예술계는 프리랜서나 임시직 등 비고용 노동직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분야로 단기 지원금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예술인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재난 보험'이나 '예술인 재난기금' 등이 필요

  • 평소에 보험금을 납입하고 재난상황 시 지원금을 받아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언택트로 변화하는 문화예술 산업 생태계에 맞는 지원정책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향유 방식이 기존의 집단 대면 방식에서 랜선 전시회, 온라인 콘서트와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새로워질 예술의 형태에 대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 비대면 문화 향유 방식의 활성화에 맞춰 영상 기획·제작, 온라인 플랫폼과 유통망 구성, 저작권 문제 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
-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VR·AR 산업의 경우 과감한 규제 완화

〈표 Ⅲ-4〉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공연문화 활성화 사례

형태	내용
온라인 유로 콘서트	· SM 엔터테인먼트 '비욘드 라이브' (전 세계 최초) · 방탄소년단 'BANG BANG CON The Live'
랜선 전시회	· 영국 테이트 모던 미술관 개국 20주년 기념 '앤디 워홀' 展
무관중 생중계 공연	· 코리안심포니 '모차르트'

이슈브리프 목록 (최근 발간順, 2018.10.25~現在)

이슈브리프 2020-06 (발간일: 2020.6.25)
▶악화일로 국가재정, 재정건전성 회복 시급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현안과 과제
▶'남북 공동선언' 재점검과 과제: '6·15선언'을 중심으로

이슈브리프 2020-05 (발간일: 2020.5.28)
▶'전국민 고용보험제' 우파적 대안 모색 시급 ▶'김정은 신변이상설': 대응과 후속조치의 문제점
▶영국 보수당의 장수 비결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4 (발간일: 2020.4.2)
▶역대 총선에서의 사전 여론조사의 문제점과 시사점 ▶文정권 정책평가와 국정지지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n번방' 사태: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해외사례 검토 ▶신종 코로나 충격의 고용감소 추정과 시사점

이슈브리프 2020-03 (발간일: 2020.3.12)
▶신종코로나의 경제쇼크, 정부대응과 시사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속 북한: "바로 보기" ▶포털의 댓글과 실시간검색어 폐지: 의미와 과제

이슈브리프 2020-02 (발간일: 2020.2.13)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Top 10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세대상생형 주거정책 방향 ▶대한민국 2040년: 정치인재 양성과 한국당의 과제

이슈브리프 2020-01 (발간일: 2020.1.16)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 ▶최근 美-이란간 충돌 관련: 현황, 파장, 전망 ▶2030 사로잡은 美·日 청년보수정치 사례분석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의의와 향후 과제

이슈브리프 2019-11 (발간일: 2019.12.19)
▶'초슈퍼' 예산과 '초미니' 재정승수 ▶2019 펭수 열풍의 사회적 의미와 교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9-10 (발간일: 2019.11.21)
▶탈북자 강제북송: 흔들린 원칙, 상처받은 국격(國格) ▶공유모빌리티 '타다' 관련 쟁점 및 시사점 검토
▶위헌적이며 정치적인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이슈브리프 2019-09 (발간일: 2019.10.31)
▶공수처, 돌이킬 수 없는 '검찰개악(改惡)'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점증하는 장기 복합불황 공포

이슈브리프 2019-08 (발간일: 2019.10.10)
▶文정부 '역대 최고 고용률'의 실상과 대책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의도, 평가, 전망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

이슈브리프 2019-07 (발간일: 2019.9.19)
▶미국發 '한-일 핵무장론' 대두: 쟁점과 대책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대비해야 ▶국민연금 재정위험과 개편방안

이슈브리프 2019-06 (발간일: 2019.8.29)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배경, 의도, 파장 ▶'강대강' 대응으로 일본 수출규제 고착화 우려 ▶확대되는 1인 가구와 보수주의 가족가치

이슈브리프 2019-05 (발간일: 2019.3.14)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유튜브 '슈퍼챗' 논란, 정치자금법의 한계와 시사점 ▶(현안보고) 베트남 미북회담 '노딜': 원인, 평가, 전망

이슈브리프 2019-04 (발간일: 2019.2.28)

▶궤변으로 덮을 수 없는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 ▶사용자 제로, 제로페이 ▶자치경찰제,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실패 우려 ▶(현안보고) 2차 미북정상회담 전망: 쟁점과 대책

이슈브리프 2019-03 (발간일: 2019.2.14)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은 일자리 창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현안보고)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20개월 경제 성적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패(必敗) 경고음"

이슈브리프 2019-02 (발간일: 2019.1.24)

▶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민낯과 과제 ▶주택공시가격 급속 인상의 문제점 ▶2018 교육여론조사(KEDI POLL) 분석 ▶ 현실과 동떨어진 자동차세와 과세기준 개편 필요

이슈브리프 2019-01 (발간일: 2019.1.10)

▶저출산 인식에 대한 우리 당의 반성과 인식의 전환 ▶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없애려고 하는가?
▶거짓 통계로 오염된 한국의 소득분배 ▶(현안보고) 북한 및 한반도 정세: 평가, 전망, 대응

이슈브리프 2018-24 (발간일: 2018.12.20)

▶일본 공적연금 개혁의 시사점 ▶2018 유럽연합(EU) 청소년 정책 방향과 시사점 ▶인공지능(AI)과 정치인의 미래 ▶(현안보고) 對국민 경제인식 조사·분석 결과

이슈브리프 2018-23 (발간일: 2018.12.6)

▶광주형 일자리, 의의와 한계 ▶생계형 일자리로 내몰리는 노인들 ▶왜 미국 중간선거에는 가짜뉴스가 없었나 ▶(현안보고) 자유한국 i노믹스(inomics) 해설

이슈브리프 2018-22 (발간일: 2018.11.22)

▶미세먼지 피해는 커지는데 대책은 제자리걸음 ▶해외 주요 방송사의 현황 및 시사점 ▶성 혐오 갈등 사태로 본 건강한 토론장의 필요성 ▶(현안보고)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 그 시사점 ▶(현안보고) 정부·여당의 사립유치원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브리프 2018-21 (발간일: 2018.11.8)

▶경제 현실을 외면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문가정당화를 위한 모색 ▶남북합의 비준 논란 관련 핵심 쟁점 및 평가 ▶(현안보고) 공공기관 고용세습 사태의 쟁점과 대응방향

이슈브리프 2018-20 (발간일: 2018.10.25)

▶고용세습으로 드러난 귀족노조의 좌파기득권 ▶사내유보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린벨트 地價마저 올리는 부동산대책 ▶(현안보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

여의도연구원은 각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을 담은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래통합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연구원
THE YEOUIDO INSTITUTE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여의도연구원 (07247)
Tel. 02-6288-0502 Fax. 02-6288-0507 http://www.ydi.or.kr